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9.26(금) ~ 2025.10.2(목)

제공일시 2025 10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9.26(금) ~ 2025.10.2(목)

제공일시 2025 10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미,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자회사에도 수출 규제...세계 공급망 '흔들'

-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자회사까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통제 규정을 발표함
- 거래 제한 목록(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자동 적용되며, 수출 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우회해 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한겨레 2025.9.30\)](#)

2. 트럼프,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 부활에 시동...美 전기료 더 치솟나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산업 부활을 위한 대규모 정책 추진에 나섰다. 미 내무부는 석탄 채굴 확대를 위해 연방 토지 1310만 에이커(약 5만3013km²)를 개방하고, 채굴 사용료(로열티)를 인하하기로 함. 이는 서울 면적의 88배에 달하는 규모임
-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판하며 전통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독립' 전략을 강조함. 그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국가는 망할 것이라며,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 등 전통 에너지로 돌아가야 국가가 위대해질 것이라고 주장함

[\(에너지경제 2025.9.30\)](#)

3. "AI기업에 투명성 보고의무"... 美캘리포니아 첫 'AI 규제법' 시행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AI) 기업에 투명성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첫 규제 법안 'SB53'을 시행함
-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대형 AI 모델의 악용을 금지하고, 기업의 안전 규칙과 사고 보고 체계 공개를 의무화함
- 법안은 화생방 무기 개발, 금융 시스템 마비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AI 남용을 차단하도록 규정함. 주요 테크 기업들은 AI 안전 관리 규정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보고해야 함

[\(뉴스1 2025.9.30\)](#)

국내 정책

1.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장안정화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4차 계획기간(2026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근거가 마련됨
- 개정안은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바꾸고, 유상·무상 할당 기준을 '비용발생도' 대신 '탄소집약도'로 명시함
- 배출권 시장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 근거가 포함됐으며, 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1 2025.9.30\)](#)

2. 에너지 자립 40% 이상...환경부, 2035년 '건물' NDC 청사진 공개

- 환경부가 2035년 건물 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모든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제시함
-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 확대와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함
- 환경부는 공개 토론 결과를 반영해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인 11월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임

[\(이데일리 2025.9.30\)](#)

3. 정부, 2035년 산업 탄소 감축률 '최소 21%, 최대 30% 이상' 제시

- 정부가 2035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21%, 최대 3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함
-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후보안으로 전체 감축률 48~65%를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률은 각각 21~30% 이상으로 설정됨
- 이는 2018~2024년 산업 부문 감축률(9.2%)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으로, 정부는 산업 구조 전환과 감축 기술 확대를 병행 추진할 계획임

[\(연합뉴스 2025.9.26\)](#)

글로벌 기업

1. 日鉄, 캐나다 Kami 철광산 지분 30% 인수...고품질 DR용 철광석 확보 나선다

- 일본제철이 캐나다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카미 철광산' 지분 30%를 인수해 고품위 직접환원용 철광석 확보에 나선다
- 일본제철은 챔피언아이언, 소지츠와 함께 합작회사 'Kami Iron Mine Partnership'을 설립했으며, 총 1억5000만캐나다달러(약 1526억원) 규모의 인수 대금 중 4200만캐나다달러(약 427억원)를 우선 납입함

[\(경북매일 2025.9.30\)](#)

2. 美 전기차 세액공제 끝...포드·GM, 우회 상품 내놔

-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에 맞춰 포드와 GM이 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가동함
- 두 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통해 재고 차량을 선구매한 뒤 리스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전해짐

[\(이데일리 2025.9.30\)](#)

3. 빌 게이츠가 찍은 차세대 전원 '지열'..."세계 전력 20% 가능"

- 빌 게이츠가 미국 지열 스타트업 페르보에너지의 강화형 지열 발전소 '케이프 스테이션'을 방문하며 지열 에너지를 차세대 전원으로 강조함
- 그는 지열이 24시간 가동 가능한 청정 전원으로 경제성과 신뢰성을 갖춘 유망한 해법이라며, 내년 100MW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함

[\(지디넷코리아 2025.9.29\)](#)

4. 중국 CATL '소금 배터리' 내년부터 본격 상용화 전망, 주류시장 진입은 미지수

- 중국 CATL이 나트륨(소듐) 배터리를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 내년부터 상용화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2026년이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의 원년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용화 이후 시장 진입 속도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함

[\(비즈니스포스트 2025.9.29\)](#)

국내 기업

1. 현대차·기아 스코프3 비상...73개 협력사 집중 교육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스코프3(공급망 탄소 배출) 대응을 위해 철강·알루미늄·타이어 등 다배출 업종 7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함

- 양사는 탄소 감축 계획과 차량 연비 개선 기술을 공유하며, 현대제철·현대트랜시스·한국타이어·한온시스템 등 주요 협력사와 감축 전략을 논의함

[\(스트레이트뉴스 2025.9.30\)](#)

2. 수소를 영하 253도로 열려서 저장하는 기술...韓日, 공동 개발 나섰다

- 한국가스공사와 GS건설이 일본 스미토모상사 한국법인과 '액화수소 인수기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3사는 정부 수소 정책, EPC 기술, 일본 수소시장 동향을 공유하며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술 협력과 밸류체인 구축에 나섬

[\(에너지경제신문 2025.9.30\)](#)

3. 삼성물산, 호주서 300MWh 태양광+저장 프로젝트 추진

- 삼성물산 재생에너지 호주법인이 퀸즐랜드주에 300MW(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와 150MW/300MWh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한 '던모어 프로젝트'를 추진함

- 삼성물산은 총 1056헥타르 부지 중 절반가량에 발전소를 조성하고, 330kV 신설 변전소와 300m×300m 규모의 던모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

[\(프레스나인 2025.9.29\)](#)

4. '포스코인터 투자' 마헨게광산 속도...50년간 공급 가능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투자한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 광산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 완료로 본격화되며, 장기 원료 공급 체계를 확보함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산 지분 19.9%와 산업용 흑연 판매권을 보유하며, 연 3만톤씩 25년간 총 75만톤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와이드경제 2025.9.29\)](#)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9.26(금) ~ 2025.10.2(목)

제공일시 2025 10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셋다운 첫날, 트럼프 기후예산 11조 삭감...미국 기후정책 마비

-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0월 1일(현지시간)부터 셋다운이 시작됐음. 셋다운은 의회가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때 발생하며, 필수 기능 외 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의미함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 관세 협상 등 우선 과제는 유지하는 반면 기후·환경 관련 정책과 연구 활동을 중단시켰음. 블룸버그는 환경보호청(EPA) 직원의 90%가 무급휴가에 들어가면서 기후 대응 역량이 급격히 약화됐다고 전했다
- EPA는 연구, 신규 규제 제정, 지침 마련, 보고서 발간 등이 모두 중단됐으며 공식 웹사이트의 정보 업데이트도 멈춘 상태임. EPA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 대응 인력을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음
- 국가홍수보험제도(NFIP)도 중단되면서 약 470만 명의 가입자와 1조3000억달러(약 1821조원) 규모의 보장 시장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했음. 보험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구 및 부동산 거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의회조사국은 2010년 유사 사태에서 한 달 평균 4만 건의 주택거래가 지연된 사례를 지적했음
- 국가해양대기청(NOAA)은 예보와 경보 인력만 절반 유지하며 허리케인·산불 예보는 지속하되 연구 및 데이터 수집은 중단됨
- 트럼프 행정부는 셋다운 첫날 민주당 성향 16개 주의 기후 프로젝트 예산 80억달러(약 11조원)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음. 취소 대상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주요 주들이 포함됐음. 뉴욕의 허드슨 터널 재건과 2번가 지하철 확장 등 18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인프라 자금도 동결됐으며, 주 정부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함
-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다양성·형평성·포용(DEI) 기준에 따른 자금 배정이 위한 소지가 있다는 이유라고 설명함
- 로이터는 구체적인 삭감 세부 내용은 에너지부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전문가들은 셋다운과 기후예산 삭감이 겹치며 미국의 기후 대응 체계가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함

[\(임팩트온 2025.10.4\)](#)